

# 새해 예산안 내달 2일 처리될까

탄핵정국과 법정처리 시한 겹쳐 결과 주목

여야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론’ … 소득세 등 뇌관

야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예정 시한인 다음달 2일(또는 9일)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과 겹치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합 평가 격인 예산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소리없이 진행돼왔지만 법정 처리시한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예산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가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이명박정부에서 인화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버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석수로는 야당이 유리하다. 더구나 김현미 예결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 더욱이 여당은 탄핵 정국에서 사본오열돼 힘을 제대로 쓰기 힘든 처지다.

일단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나섰다. 이에 각 당은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를 슬쩍 내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자칫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부담감을 느끼

는 정 의장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는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상과정에서 야권공조에 나서야 할 국민의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7일 “이날까지 예결위와 상임위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극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야당은 내달 2일을 유력한 ‘탄핵 디데이’로 삼고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감안, 여야 간 충돌을 최소화하며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전통정원 활성화 하려면

호남 3대 정원 명소화 나서야”

전남도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호남이 가진 소쇄원, 백운동 정원, 부용동 정원 등 3대 정원의 명소화 사업이 한국전통정원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 민선 6기 후반기 프로젝트인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중요자원인 도내 정원에 대한 보존과 재평가, 가치 제고, 전국적·세계적 인지도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정원 관련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정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전남 곳곳에 흩어진 전통정원의 보존 방안 마련, 현대적 관점에서 가치 재창조, 상호 네트워크화해 지역의 명소로 가꾸는 방안 마련 등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송태갑 실장은 단계적으로 호남의 3대 정원인 소쇄원, 백운동 정원, 부용동 정원을 중심으로 명소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남에 흩어져 있는 누정, 사찰, 향교, 별서, 화계, 연못(방지) 등 정원 자원의 정비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는 전통정원을 호남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신한국정원 조성 및 정원도시 구현을 전략으로 내놓았다.

첫 단계로 사찰, 민가정원, 물의 정원, 누정, 들뜬 등 전남의 보물들에서 정원 자원을 찾아 치유와 명상의 가치를 부각한 정원으로 가꿀 것도 제안했다. 정원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을 인류문화유산으로의 가치 조명을 위해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내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부, 탈북민 고용 확대

정착지원금 단계적 인상

정부와 공공기관 내 탈북민 고용이 확대되고,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통일부는 27일 탈북민 3만명 돌파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에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각각 700만 원, 1300만 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임금 및 불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착금은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에 각각 지급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결음을 하고 있으나, 월 최저임금은 2013년 109만8360원에서 올해 136만278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리틀 아바나’ 지역에서 쿠바계 주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들이 카스트로의 사망을 환영하는 까닭은 그들 중 상당수가 카스트로 집권 이후 공산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탈출했거나, 그렇게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카스트로 타계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사진)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밤 타계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쿠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다. 향년 90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은 자신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가 25일 밤 10시 29분 세상을 떠났다고 26일 0시가 좀 지나서 국영 TV를 통해 발표했다.

1926년 스페인 출신 이주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1953년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타도하려고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실패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1955년 특사로 석방된 그는 멕시코로 건너간 뒤 쿠바 정권을 공격할 조직을 건설하고 1959년 1월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는 반세기 가까이 총리, 공산당 제1서기, 국가평의회 의장을 연이어 맡으며 쿠바를 이끌다가 건강 문제로 2006년 친동생 라울에게 정권을 넘겼다. 2008년엔 공식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면서 49년간의 권좌에서 내려왔다.

쿠바 혁명 이후 피델은 외국의 좌파 혁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과는 수많은 갈등을 빚었다. 피델의 쿠바는 1961년 4월 미국의 피그만 침공을 격퇴해 군사적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1962년 10월엔 구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사태는 결국 구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철거하고 미국이 쿠바 해상 of 봉쇄를 해제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뤘다.

미국과 쿠바는 2014년 12월 53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5년 8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재개설됐고, 올해 2월 두 나라를 오가는 정기 항공노선까지 재개통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쿠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 의동생 라울 카스트로 간의 미-쿠바 정상회담이 88년 만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명위원회

전남도 지명위원회가 지난 25일 여수~고흥 간 연륙교 명칭을 ‘팔영대교’로 재결정했다. 다음달 있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4월 ‘팔영대교’로 의결했으나, 6월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여수시와 고흥군 간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었다.

팔영대교는 고흥 팔영산에서 차용한 이름으로 여수시는 단독 지명 사용에 반대했다. 중재안으로 여수 적금도를 혼합한 ‘팔영·적금대교’ 또는 ‘적금·팔영대교’, 두 지역명의 첫 글자를 딴 ‘고려(高麗)대교’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고흥군은 팔영대교를 고수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전국 지명 전문가 2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전남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양 시·군과 의결 방법을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대전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 도 지명위원회를 통해 ‘팔영대교’라는 명칭으로 결정했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의 하나로 건설 중인 여수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총길이 1340m) 사이 교량은 연말 완공 예정이다. 여수~고흥 간 연륙교 명칭은 앞으로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쳐 12월 중순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팔영대교 고흥군민대책위원회’와 고흥군의회는 이날 전남도 지명위원회의 재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온열뜸기, 아류뜸,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재정판 고려수지침강좌 최신 개정판

고려수지침·서금요법 14기맥학(十四氣脈學) (제3 개정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8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

488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